



국가안전기관의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방향성제고



최 예 환

한국방재협회 자문위원
한국방재학회 고문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I. 서론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적 흐름 속에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오늘날처럼 재난 안전관리에 온 국민들이 관심과 안전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안전성을 제고한 재난을 관리해야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 온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과거에 재난의 피해 규모나 빈도가 낮았던 것이 아닐것이다. 1960년~70년대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DP)이 67\$ 정도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못사는 나라에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 20,000\$이 넘는 시대가되고 보니 소득이 적을 때의 재난안전관리를 구축해오던 것이, 2013년에 24,000\$대로 넘는 시대에 와서도 산업화와 문화의 발달에 버금가는 재난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소득에 걸 맞는 재난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나 우리의 자세가 미흡함으로서 대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자문자답해본다.

과거 1953년의 부산역전 대화재 사고에서 부터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은 잊을 수 없는 재난들이 수 없이 많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뿐 아니라 지구의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이상기후변화가 나타나 태풍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대표적인 것이 태풍 루사(2002)와 태풍 매미(2003)를 들 수 있으며,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기상재해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분야에서 취약점을 각각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큰 규모로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 못하고 있다.

다만 재난은 옛 말처럼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이 있듯이 미리 예측, 대비, 대응을 하면 화를 면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어 방재 분야에 대한 경고성 문구로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 잃고 외

양간 고친다.”라는 격언도 우리에게 경종을 준다. 비록 소는 잃어버렸더라도 다음에는 소를 사육할 때 또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외양간을 튼튼히 보수해야 똑 같은 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 우리의 재난 속에 경고성 말로 쓰고 있다.

흔히 건설현장에 내건 표어를 보면, “금년은 무재해의 해입니다.” 또는 “금년은 무재해 원년으로 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써서 입구에 걸어놓은 것을 볼 때 재해·재난에 대해서 미리 대비, 예방, 주의, 대응하는 것을 표어로 삼고 공사장 근로자나 지도 감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고성 문구로 느껴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공사현장에 뜻하지 않는 사고로 무고한 생명을 실수 또는 다른 원인으로 잃고 또 현장을 정상가동하려고 복구 기간이 많이 소요하게 되므로 이래저래 인명손실, 물질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조그만 주의한다던지 취약성만 보완한다면 무사히 공사 진행이 원만히 되고, 재해·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했고, 무책임 했고, 반대로 몸에 배여 있는 교육실시와 체험을 익혀 잘하는 현장이나 공사장이 있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처럼 교육이나 훈련이 전혀 없이 서류상만 이상무라는 안전점검을 한다면 무슨 방재 또는 재난을 저감시키거나 무재해로 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소득과 문화수준이 선진국을 향해 새로운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우리의 여건과 마음가짐과 제도와 운영이 과연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한 답을 내지는 못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우리는 국가의 안전기관을 어떻게 신설하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느냐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Safety Korea)”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II. 국가안전기관의 조직 방향

1. 정부조직개편 방향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이후 약 60년 동안에 50여 차례 정부조직법이나 개별법령을 개정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빈도가 많은 셈이라고 보고 있다. 현 정부 출발 당시 이미 손질을 하여 종합적으로 한국의 조직개편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행정과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거나 협조가 원만하지 못한 기관들을 통폐합함으로써 국가 정책 조정을 원활히 하고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사건으로 인해 재난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조직에 국가안전기관을 통폐합하여 재난안전관리에 시너지효과나 재정적,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다면 안전한국(Safety Korea)

로 가는데 크게 기대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에서 새로이 안전 분야의 국가기관을 신설하려고, 통폐합해서 조직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존의 안전부처에 타기능만 남겨놓아 부처의 신설 및 통폐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새로이 만드는 국가안전기관(처)은 명실상부한 국가백년대계의 재난안전과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자연과 함께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공공자산을 보호하고,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 증진을 통한 시민들의 생명과 복지의 문제를 관리하기위한 것으로 개인과 지역, 그리고 국가관리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재난 및 안전 관리의 기본법 정신

법령으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호우, 화재 등이 발생하는 재해이며,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재난의 종류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깊은 뜻에 부합하도록 현 정부는 핵심 국정기조로 “안전”을 내세우며, 부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개명하고,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 하였다.

안전행정부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해 재난 발생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총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도 부여하였다. 그동안 중대본은 오래 동안 재난대응 역할을 주도하던 소방방재청의 전면인력을 흡수하지 않은 채 조직했다.

이와 같은 여러 경향을 볼 때 이번에 새로 조직하는 국가안전기관의 통합개편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험의 출발점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동안의 조직개편을 했더라도 이번 기회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통합관리를 지향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각 부처내 재난 안전기능의 중복·조정을 위해 각 부처 기획조정실내 “재난안전총괄과” 신설 등 합리적인 조직 개편을 한다면 더욱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여러 선진국의 예를 보면 특히 미국은 국토안보부(DHS)안에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tion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을 두고 관장하며, 협의를 통해 자원봉사단체(VOAD)운동의 성장과 강화를 자발적인 조직들이 재난으로부터 준비하고, 대응하고 회복하는 최적의 방안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위기관리조직체를 연방내무부 장관으로부터 행정 2차관 산하에 여러 위기 관리시스템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도 위기관리 조직체계는 내각(총리) 산하에 두고 부대신, 내각관방(내각관방장관)을 두고 조직체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도 내각장관 산하에 여러 지국설치와 국가안전위원

회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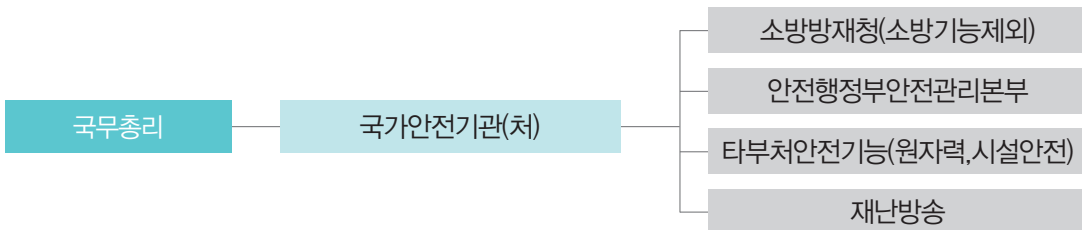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본정신과 목적에 따라 국가안전기관의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부처를 설치하고, 주무부처에서는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두어서 사고를 수습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

3. 조직 구성 (구조적/ 비구조적)

박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발생과 초동대처 및 수습과정에서 일어난 정부관계당국의 혼선과 상황전반에 대한 사과를 했다. 이로 인해서 무능으로 들어난 해양 경찰청 해체와 국가 안전처 신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개혁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해경이 출발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며,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지적하고, 재난안전의 기능의 담당부처의 개선과 신설 또는 통폐합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결국은 국가안전기관(처)의 신설을 결론내리고 해당부서의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이 신설되는 안전기관은 그 기능과 운영면에서 구조적/비구조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제시해본다. 즉, 구조적인 조직과 편성 그리고 관리 및 장비의 선진화를 생각하게 되고, 비구조적인 네트워크(Net Work)구축으로 제도 및 법규와 인재양성과 교육 및 R&D제도를 도입하고 훈련이 해당부서에서 실제 상황에 버금가는 똑 같은 상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실제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그 피해를 줄이고, 인명구조와 재난의 저감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1) 조직(안)



2) 비구조적(안)

재해보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재난 방송이다.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방송의 전파성이나 속보성 및 광역성 등의 특성을 살리는 길이 된다. 재난 발

생시에 신속한 보도와 정확한 행동요령을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은 방송이 국가 방재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만큼 방송이 공적으로 책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정책으로 스마트 시대의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난방송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으며, 방송국 내에 두던지 신설되는 부처에 설치를 하던 간에 현재보다 더 합리적인 재난방송 기능을 갖추는 시스템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면 재난안전에 기대하는바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규모의 홍수, 태풍, 지진, 폭설, 한파, 산불 및 대형화재, 건물·교량붕괴, 항공기추락, 선박침몰 등 피해규모가 크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해치는 사건·사고는 방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방송뿐만 아니라 제도, 법규와 인재양성과 교육 및 R&D제를 도입해야 장래성이 있다고 본다. 제도나 법규는 현실에 맞게 손질을 하고, 인재양성과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교까지 재난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켜야한다. 더 나아가 R&D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재난·재해분야에 안전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환경과 이상기후의 변화 속에 재난·재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유지 및 안전관리와 긴급대응체계

1. 환경변화에 기인한 재난·재해유형

지구 온난화나 지구촌의 오염, 대형재난·재해는 큰 뉴스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20년간에 이러한 환경변화는 우리의 환경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성을 지닌 사회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오늘의 안전이 반드시 내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위환경의 변화는 지구온난화로 최근 지구평균온도가 100년간에 0.74°C 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그 2배인 1.5°C 상승하였으며, 북극해빙 등의 원인으로 해수면상승은 지난 43년간(1964-2006)에 한반도연안 해수면은 약 8cm,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제주지역은 무려 22cm(매년 5.1mm)상승하였다고 한다. 또한 CO₂ 저감탄소세 등을 가져왔고, 오염이 가속화하여 공기, 수질, 토양, 오존층의 파괴를 도래하였으며, 지구촌에 생태계는 원전과 핵물질로 방사능의 노출과 해양생태계의 생물교란 등 우리의 환경을 더욱 불확실 하게 하고 있어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하의 표는 이러한 재난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재난·재해유형도를 나타내었다.

재난·재해유형도

구분	내용
인적재난	항공기(중돌, 추락), 터널, 화재, 철도, 건물붕괴, 선박침몰, 핵잠수함, 원자력발전소, 폭발(가스, 석유), 케이블카, 테러(폭탄, 항공), 교통사고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쓰나미, 산사태, 토네이도, 화산 폭발
복합재난	댐붕괴, 제방붕괴, 침수
사회적재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전염병

2. 현행 관계법규의 연구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재해 및 안전에 관한 법규들이 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혹 우리가 더 연구하고 개정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관계법규를 보면, 재해에 관계되는 주요 법규로는 ①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4조), ②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제16조), ③비상대처 계획 수립(제37조), ④재해복구 사업의 평가(제57조), ⑤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등이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이 필요시 개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둘째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회원 구성과 주요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에 속한 법규이다. 즉, ①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제29조의 2), ②재난대비 능력보강 : 긴급구조 및 교육기관 지정(제55조), ③대국민안전교육 실시(제66조의 5), ④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제66조의 6), ⑤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제71조)등을 실정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법규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선진국 재난·재해 대응책

1) 미국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하여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하며, 중앙과 지방 정부에 역할분담하고, 재난구호를 기능별 기관역할분담을 하며, FEMA(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관리 지원형으로 정책제시, 사고수습 후 사건 경과 및 대처, 문제점 등 상세히 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현장 체험형 매뉴얼을 제공한다. 또한 FEMA에서는 육군공병단, 농림성 토양보전국 등 여러 기구가 있으나, 주로 연방재난 관리청(FEMA)에서 통합관리한다. 그 외 재해보험 제도, 연구 및 교육, 예방활동

등도 철저히 한다.

2) 일본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 중심으로 지진방재에 대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법제를 가지고 재해별 단계별 법률을 만들어서 중앙방재회의 중심으로 많은 재해를 겪으면서 발전을 해왔다. 또한 대지진의 경험을 통하여 방재교육을 철저히 하고, 재난·재해 체험과 대응방법 체험으로 실제 재해발생시 피해의 최소화와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국민보호재난지원청 중심으로 주정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대응하며, 공동신고상황 센터를 설립하여 긴급사태, 정보시스템(deNIS)을 구축하고, 반복 재난방지를 위한 사후 평가제도를 반드시 수행하고, 방재업무는 지자체 차원으로 수행하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는 예산을 보조하고 있다. 반복되는 재난·재해를 막기 위해서 철저한 사후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해보고서 작성과 예방대책설계를 하여 시행하고, 주민참여시스템과 정부조직과의 유기적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켈른시 소방방재청의 슈미트박사는 재해의 사후평가 및 대책마련 등의 업무가 최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예산 등을 보조해줄 뿐이고,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원인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가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위와 같이 선진국의 재난·재해 상황을 살펴 볼 때,

가) 단일한 지휘체계,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응,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 현장 중심,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 미국은 통합적 관리방식이고, 일본은 분산적 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수직적 구성으로 연방정부 주정부간 긴밀한 협력체제이고, 수평적으로는 FEMA에 재난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를 통합하였다. 일본은 중앙방재회의에서 국가방재대책의 종합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고, 재난대책조정과 결정을 하며, 사고시에 유형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 각 성과 청은 재난관련 업무를 분산하여 수행한다고 한다.

4. 긴급대응체계

우리나라의 긴급재난대응체계를 보면 사회적재난은 안전행정부, 자연적재난은 소방방재청으로 지휘체계의 혼선이 우려되며, 재해상황 발생시에 내부안보체계, 상황지휘 및 관리 등에 업무로 혼선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즉 재난재해 시스템상으로는 재난·재해시 안전행정부 소속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활동하고 국가위기관리매뉴얼은 크게 3단계로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현장매뉴얼로 되어있고, 산하지원기관의 실무매뉴얼 200여개, 현장조치매뉴얼은 3,200여건으로 매우 혼잡스럽다.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도 불명확함으로 대형사고시 체계적 대응에 한계를 가져오고, 매뉴얼과다로 합리적인 통합적인 시스템 부재를 가져오기 쉽게 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새로이 조직되는 안전기관(처)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기존의 매뉴얼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IV. 재난안전의 연구 역할

1. 연구 개발

재난체계의 상황은 평범한 일상이면서 생존과 결부되는 극한 상황까지 연계되어 재난·재해로부터 생존한 사람의 경험과 다양한 전문가의 지식을 접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연구(R&D사업)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사용자 참여를 통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예로 과학기술은 NASA의 인명구조를 캡슐(피닉스)에서 부터 NASA의 특수음식, 박테리아로 부터의 건강유지를 위한 구리섭유의 의복, 광통신기술 프로젝트 등 종합적인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주를 정복하는데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연구를 해왔다.

따라서 전자, 정보, 통신, 기계, 생산가공, 교통, 항공우주, 천문 환경, 지구해양, 에너지, 자원, 원자력, 도시·건축·토목, 소재, 화학, 공정, 생명과학, 농림·수산, 보건·의료, 극한기술 등 각 분야에서 재난·재해에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밖에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등에도 재난·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재해의 예방을 함으로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라는 격언처럼 선진연구와 사전예방으로 사후복구비를 절약하고, 재난의 안전을 기하는 재난안전관리의 지혜를 발휘할 때 오늘날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생활 자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교육프로그램과 정책방향

최근에는 어린이가 감수성이 예민하여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은 어린이가 다룰 줄 알고 장난감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조기교육으로 재난안전교육을 프로그램에 넣

어 교육시켜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깊은 인식과 생활화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현장체험과 생활화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간단한 예로 지하철 화재발생시의 행동요령과 대피지식을 넣어주어 체험을 통한 이론과 행동을 일치하는 체험교육이어야 산교육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자연스러운 재난·재해관리인식을 지니고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사전교육과 매뉴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안전사건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레 광산사고이다. 27일간의 광부구출 작전에 한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구출한 성공의 Case이다. 이들은 매뉴얼에 따라 광산붕괴 대피용 공간을 마련하고 침착하게 인내와 끈기와 지상과의 의견소통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매몰자 전원이 구조된 경우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재난·안전 분야별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길로 매진해야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정부나 입법기관에서는 안전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예산이 뒷받침이 되도록 행정부나 국회에서 합심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후속조치가 없는 한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재난안전관리에 기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위험사회(Risk Society)의 도래는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까? 즉 사후처방보다는 어떤 재난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재난을 저감하고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즉 안전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면, 첫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는 재난안전훈련을 실상과 똑같이 훈련하고 예산도 뒷받침 하고 있다. 표준매뉴얼 개발과 안전훈련 및 교육, 홍보 등으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교육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론교육과 실습 및 체험교육을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국가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의 필요하다. 공통기능을 통합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안전처(안)를 신설하면서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을 이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구조·구난, 경비기능을 국가안전처(안)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안으로 잡고, 공무원인사, 정부조직, 전자정부기능을 이관하여 행정 혁신처(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단일부처 조정하에 병렬적 다수 기관간의 연계성 강화와 모든 유형이나 규모의 재난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정보전달의 일원화 및 인지강화 그리고 재난발생시 총괄적 자원 동원과 신속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재난·재해 구호 투자가 미흡함으로 재난·재해분야에 국가예산 투자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인 양성이다.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관리를 예방시스템과 대응체계에 종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위험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실시하여 안전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V. 맺음말

인류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고도화 할수록 불확실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안전기관(처)을 신설한다면 그동안 미흡했던 재난안전분야에 안전한 한국(Safety Korea)실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는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둘째, 정부조직에서 국가안전기관(처) 신설로서 병렬적인 재난안전 분야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부서로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을 방재분야에 도입하여 연구비 확대 지원과 실용성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의 재난안전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중·고교까지 교육과 체험을 하고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실제와 똑같은 상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방재제도의 합리성을 위하여 방재기사, 방재기술사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끝으로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한국(Safety Korea)을 만드는 것이 곧 행복한 한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